

碩·博士學位의 資格 요건과 審査 과정

李 萬 甲
(前 서울大 敎授)

1. 序 言

韓國에서 碩·博士學位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碩士課程에서 24 학점, 博士課程에서 36 학점을 취득한 학생으로서 각각 해당 학위의 論文提出 資格試驗에 합격한 학생이어야 한다. 합격한 학생은 指導敎授의 지도 밑에 작성된 論文을 일정한 기일내에 제출하여 소정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審査委員會의 심사를 거쳐 상당한 수준의 논문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심사에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해진 行政節次를 밟은 뒤에 學位를 수여받게 된다.

이 일련의 과정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재하게 된다. 그런 문제 중에 중요한 것들을 들면 대개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碩士 및 博士學位를 수여받을 사람들은 어떤 資格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가이다. 둘째로는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심사하는 것이 옳으나 하는 것이다.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세번째의 문제는 碩士課程과 博士課程의 연결을 어떻게 맺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네번째는 필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석·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大學은 어떤 要件을 구비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말하자면 석·박사학위

를 받을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學位를 수여하는 측의 資格要件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2. 大學院敎育의 實態

그런 문제들을 논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들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大學院敎育의 실태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필자는 大學院敎育의 本質이 무엇이며, 그 주요한 기능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專門的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할 처지에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敎育制度는 해방 후 美國의 制度를 채택한 것이고 大學院敎育도 역시 美國의 그것을 본딴 것으로 알고 있다. 美國의 學風을 보면 學部에서는 좁은 전공 분야의 지식을 집중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교양을 다지고, 학문하는 자세와 학문의 기본적인 原理 및 研究方法를 이해하며, 전공 이외에 副專攻을 갖도록 해서 폭 넓은 學問的 視野를 가지고 人生 經歷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能力을 지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本格的으로 전공 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석사과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석사과정만으로는 자기의 전공 분야에 관한 지식이 튼튼하다고 할 수 없으며 박사과정을 수료하여 論文이 통과되어야만 그 분야에 관해서 만족스

러울 정도의 專門의 知識을 갖고 學者로서 獨立的으로 연구할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制度를 받아들일 때에 大學을 운영한 사람들(주로 教授들)은 日政時代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때의 體驗을 통해서 인식한 개념들과 해방 후 말로만 듣고 인식한 개념들간에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大學院教育이 잘못 실시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學士學位와 博士學位를 수여하는 제도는 日政時代에 있었던 것이므로 그 때에 실시된 제도, 즉 舊制에 의한 개념으로 어느 정도 新制의 학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짐작할 수는 있었지만 석사학위는 舊制에 없었기 때문에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았던가 생각된다. 또한 新制의 學部課程은 대부분의 교수들이 日政時代에 실시한 대로 專門性이 강하며 마치 석사과정과 다름 없을 정도의 수준이 높은 교육을 실시하느라 예쁜 반면에 大學院課程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리고 新制에 의한 박사학위는 舊制의 그것처럼 學問의 蘊蓄을 기울인 大家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여 박사과정에 입학하려는 학생을 아직 學位를 받기에는 학문이 미숙하다고 생각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꺼릴 뿐만 아니라 입학한 학생에게 敎育을 충실히 실시하지도 않았다. 또 學位를 수여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도 않았다. 다만 醫學 분야에서는 日政時 오늘의 專門醫 制度가 없었던 대신 전문성을 띤 연구를 한 사람에게 博士學位를 수여하는 일이 慣例化되고 있었으므로 新制에 있어서도 그 분야만은 志願者가 많았으며 敎育과 研究도 다른 분야보다는 비교적 착실히 실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므로 醫科大學을 설치하고 있는 大學에서 보면 大學院課程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분야는 의학 분야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처럼 의학 분야의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大學院의 敎育責任者는 醫學系의 基礎分野 教授가 되는 것이 常例로 되어 있는 大學이 많았던 것 같다.

大學院教育이 本軌道에 들어가는 노력이 전개되는 것은 대체로 '70년대에 들어설 무렵이 아

닌가 생각된다. 그것은 첫째로 舊制에 의해서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길을 없애게 됨에 따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둘째로 大學院을 나온 高級人力을 요구하는 직업이 많아졌다는 것이 그런 노력을 촉진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大學教授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원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최소한도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면 임명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세번째로는 外國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사람이 많아져서 그들을 통해 大學院教育이 어떻게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大學院敎育의 修正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동시에 그들이 국내의 중요한 자리를 쉽게 차지하는 것을 보고 高級人力養成을 위해서 大學院敎育을 活性化하여 석·박사학위 소지자다운 사람을 키워야겠다는 소리가 높아졌다는 것도 그런 노력을 자극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네번째는 韓國의 大學敎育에 있어서 중요한 影響力을 갖고 있는 서울대가 분산되어 있던 單科大學들을 統合하여 주 캠퍼스를 지금의 冠岳山 기슭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學制를 대폭 개편하는 가운데 大學院 문제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서울대의 경우 大學院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만 大學院의 실질적인 기능은 大學院課程을 두고 있는 각 單科大學의 學科가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大學院長은 무슨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가 하면 大學院委員會의 議長으로서 大學院 運營을 위한 原則的인 문제 또는 共通的인 문제들을 심의 결정하는 일을 관장하고 있다. 거기서 심의 결정된 내용에 따라 大學本部(주로 敎務處)가 해당 單科大學의 行政機構를 통해서 實務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大學에서는 역시 서울대에서 전에 한 것과 같이 大學院이 독립된 기구로서 자체의 敎務, 學生業務, 行政業務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대에서는 學制를 개편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大學院中心大學을 지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大學院敎育의 質的 向上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 가운데 여러 문제점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기대하는 만큼

시정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에 관해서는 本稿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3. 碩·博士學位의 資格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는 각기 해당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論文提出 資格試驗에 합격하여 제출된 논문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審査委員會를 통과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要件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첫째의 문제는 學點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講義, 演習, 實驗, 實習 등의 내용이 충실하고 학생들이 그 課程을 착실하게 이수했다는 것을 바람직하게 評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客觀的으로 타당성 있게 작성되었다고 믿어지는 資料에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잖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서울대를 보면 최근 10여 년 동안 大學院教育을 충실히 실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되지만, 先進國의 一流大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人文·社會科學系에서 더욱 그렇지 않은가 생각한다. 교수들의 자제도 學部에 비하면 大學院課程에 대한 熱意나 關心度가 낮은 편이 아닌가 느껴진다. 반면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훌륭한 論文을 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충실히 공부하는 학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학생이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課程을 충실히 이수하게 하는 것과는 문제가 다르다. 왜냐하면 각 과정은 상당한 學問的 識見을 가진 교수들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들을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의 문제는 論文提出 資格試驗에 관한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를 보면 석사논문의 제출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별로 문제가 제시되는 일은 없는 듯하다. 그것은 석사학위 자체를 대단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어서 시험이 별로 어렵

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석사학위를 받는 사람은 어려운 박사과정 입학 시험을 치르려고 단단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응할 준비를 평소부터 하고 있어서 웬만큼 공부한 사람이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博士學位論文提出 資格試驗이다. 여기에 서의 문제는 大學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같은 大學이라도 학문 분야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도 역시 필자가 몸담고 있었던 서울대의 경우를 주로 하여 다룰 수밖에 없다. 서울대에서는 論文提出 資格試驗에 있어서 석·박사과정 모두가 專攻科目과 제1외국어 등 두 가지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人文·社會와 自然, 그리고 藝體能系에 있어서도 同一하다. 그러나 제2외국어에 있어서는 分野에 따라 다르다. 人文·社會系에서는 제2외국어의 시험을 석·박사과정의 입학 시험과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서 공히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藝體能系에서는 어느 경우든 제2외국어의 시험이 없다. 그러나 自然系에서는 석사과정의 입학 시험이나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서는 제2외국어의 시험이 요구되고 있지 않다. 또 박사과정 입학 시험에도 제2외국어의 시험은 없다. 그러나 박사과정의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서만 제2외국어의 시험이 人文·社會系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系列이든 석사과정에서는 전공 과목, 제1외국어, 제2외국어의 시험에서 모두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하며, 박사과정에서는 세 과목 시험 성적이 모두 70점 이상이 되어야 승격이 된다.

이러한 기준 설정은 박사학위를 받을 사람이 석사학위를 받을 사람보다 語學實力과 專攻에 관한 知識에 있어서 뛰어나야 한다는 인식에 입각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은 論文提出 資格試驗이라는 어려운 障礙를 넘는 데 많은 고초와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또 실제에 있어서 적지 않은 사람이 몇 번씩 탈락하는 쓰라린 경험을 겪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석사학위를 받는 사람보다 전공에 관한 지식을 더 깊게 또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남

득이 가는 일이지만 研究의 手段이 되는 語學實力에 있어서도 더 우수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박사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外國文獻이 석사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외국 문헌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공 분야에 관한 知識의 평가만 공정하고 엄격하게 실시된다면 사실 語學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語學試驗을 어렵게 출제해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논문 제출 자격 시험에서 또 하나 문제시해야 할 것은 碩士論文 資格試驗이다. 석사논문 자격 시험은 대부분의 학생이 순조롭게 課程을 밟는다고 전제할 때 입학 시험이 실시된 지 2년도 못되어 치르게 되는데 이것은 입학 시험과 大同小異한 시험을 너무나 짧은 기간에 치르게 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전공 과목의 공부와 논문 준비를 위한 研究活動에 힘을 덜 기울이게 하는 逆機能을 자아내게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세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시험이 너무 빈번하다는 것이다. 한 학생이 碩·博士課程을 모두 마치려면 입학 시험과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을 합해서 적어도 네 번은 치러야 한다. 치르는 사람이 있어서도 그것은 큰 부담이 되지만 시험을 실시하는 측에서 겪는 부담도 이만지만 한 것이 아니다. 특히 제1 외국어의 경우 문제를 系列別로 따로 내야 하기 때문에 英語 시험 문제를 작성하고 채점해야 하는 교수들이 많이 동원되어야 하며 소비하는 시간과 노력도 여간 큰 것이 아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英語를 담당하는 교수들은 보통 1년에 14번 시험 문제를 출제하던 때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논문 제출 자격 시험 출제의 평가를 語學研究所에 위탁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런 종류의 研究所가 없거나 語學教授가 많지 않은 大學에서는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專攻科目에 관한 論文提出 資格試驗 문제를 치르게 하는 각 學科가 어느 정도 적절한 문제들을 작성하고 또 客觀的으로 신빙성 있는 評價와 그 밖에 필요한

管理業務를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작성된 문제가 일부 학생들에게 누설 또는 암시된다거나 혹은 평가에 있어서 情實이 개재한다든가 어떤 편파적인 처사가 취해지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하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제1 외국어의 合格線을 70점으로 경하게 된 것도 그런 사람들의 不信感이 깔려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4. 論文審査

論文審査에 관해서는 표면상 특별히 이렇다 할 문제가 별로 제기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까닭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논문 심사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것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논문 심사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舊制에 의한 博士學位論文의 심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法에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한 일도 있었지만 舊制가 없어진 뒤에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는 듯하다. 물론 新制에 의한 學位論文審査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사소한 것들이어서 대체로 큰 말썽을 빚지 않고 해결되고 있는 듯하다.

필자가 보기에, 표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없어도 관심을 가져야 할 잠재적인 문제점은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점은 논문 심사가 要式만 충족시키는 데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만족한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첫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學位論文을 준비할 때 指導教授의 지도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적절한 지도를 받고 論文을 쓰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면,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대로 지도를 받지 못하고 논문을 쓰는 사람이 꽤 많지 않나 느껴진다. 論文主題에精通한 교수가 指導教授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로 主題에 관련이 없는 교수가 명목만 指導教授

로 되어 있거나 主題에 관련이 다소 있더라도 실질적인 지도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하다.

둘째로는 論文審査를 어느 정도 충실히 실시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論文審査委員會의 구성이나 審査의 절차는 대체로 규정대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적절한 사람이 심사위원이 되며, 그들이 論文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이것 역시 필자는 회의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다.

이상에 지적한 두 가지는 論文의 지도와 심사가 形式 위주로 치우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만, 그 이외에 또 하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行政的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論文審査料의 문제이다. 논문 심사료는 公的으로 정해진 액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大學, 특히 國立大에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 적게 책정되고 있어서 정해진 액수 이외에 또 추가해서 논문 제출자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된다. 듣는 바에 의하면 비공식적으로 징수하는 돈의 액수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 그러므로 文教當局은 論文審査料를 현실적으로 책정하여 규정에 위배되는 부조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論文審査——주로 博士學位論文 심사의 경우지만——뒤에 논문 제출자가 심사위원에 대해서 베푸는 饗宴이나 그 밖의 형태의 謝禮이다. 이것 역시 필자는 그 實相을 자세히는 몰라도 지나치고 생각되는 일이 꽤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듣고 있다. 사람이 사는 데는 儀禮가 있게 마련이고 또 잘만 운영하면 社會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論文심사에 합격한 사람이 자기의 기쁨과 감사의 뜻을 심사위원에게 표시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社會的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형태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여 적절

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 結 語

석·박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論文提出資格과 論文審査의 두 가지 문제다. 그 밖에 또 하나 문제를 든다면 碩·博士의 進賢을 들어야 할 것이다. 석사와 박사는 별개의 과정이며 教育行政上 그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學問으로서의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科目이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속한다고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점에서 석·박사과정은 教育行政面에서도 좀더 相互連繫性이 가미되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석·박사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석사과정을 박사과정에 도달하는 하나의 過渡的인 단계로 보고 있어서 석사과정의 현실적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석사과정으로 족하고 그 이상의 專門的知識을 가질 필요가 강하지 않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는 석사과정만 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득이 적고 學問的으로도 어중간해서 아예 석사과정을 박사과정에 흡수하여 두 과정을 통합해 버리는 편이 좋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美國의 여러 大學에서는 두 과정에 엄격한 境界線을 설정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뒤에 다시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形式的節次를 밝게 하는 것이 아니고 大學院에 입학하면 곧바로 박사학위를 받는 길을 밟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利點이 있다.

첫째로 학생들이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 시험을 치고 논문을 제출하며 다시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關門을 거쳐야 하는 부담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부담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절차를 밟는 동안에 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소비하는 노력, 시간, 돈은 상당히 큰 것이다. 만일 그 節次를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한다면 학생은 그 노력을 研究活動에 계속 투입할 수 있을 것이고 學校當局은 그 節次를 취하는 데 필요한 行政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교수들도 여러 가지 번거로운 業務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로 말하고 싶은 문제는 학생들의 課程履修의 신축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學者가 각 분야에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大學院課程을 이수하려 할 때 자기가 꼭 하고 싶다는 연구 과제에 관련되는 學科目이 없다든가 적절한 指導를 해줄 만한 교수가 없어서 곤란을 겪는 일이 빈번하다. 이 곤란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자기가 속해 있는 學科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다른 大學院의 강의를 청강하고 거기의 성격이 학점 취득에 반영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大學院이라는 것은 國內에 국한하지 않고 外國에까지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어느 정도 자기의 大學院에서 연구를 하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外國의 어떤 大學에 잠시 留學하여 教授의 지도 밑에 연구한 후 리포트와 함께 그 교수의 認定書を 함께提出케 하여 학점에 반영케 한다든가, 혹은 外國 大學에서 취득한 학점을 심사를 거쳐서 인정한다든가 하면, 학생들의 學問的 活動은 상당히 彈力性 있게 전개되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끝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에게 學位를 수여하는 學校當局의 문제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은 학위 취득에 관련된 規定이나 節次는 얼마든지 충실히 준수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연 學校當局이 석·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설과 유능한 교수들을 갖추고 있으며, 課程들이 만족스럽게 실시되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學位를 수여받으려면 충실한 研究를 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연구하려면 우선 연구 시설이 있어야 한다. 圖書를 비롯하여 각종 資料가 있어야 하며 없으면 있는

곳에서 빌려오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自然科學 분야라면 實驗하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大學에 博士를 양성할 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大學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특히 外國의 자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人文·社會科學 분야의 圖書 시설은 모두 博士課程을 운영할 만한 수준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大學 중에서 圖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서울大조차도 거기에 소장되고 있는 藏書 구성을 보면 박사과정은 고사하고 學士課程조차 만족스럽게 실시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니 다른 大學의 圖書 시설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圖書 시설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유능한 教授이다. 유능한 교수는 學問이 깊고 研究와 教育에 있어서 뛰어난 뿐 아니라 學者로서 또 教育者로서 가질 倫理的 姿勢와 사리의 파악에 있어서도 훌륭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교수들이 많으면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옹계 지도하고 또 평가할 것이며 그리 할 수 없는 狀況이라면 條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리하여 碩·博士課程을 만족스럽게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그 과정의 실시를 보류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그런 유능한 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석·박사과정이 충실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석·박사학위를 위한 論文提出 資格試驗의 평가와 論文審査가 바람직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석·박사학위 수여에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격 여건과 심사 과정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學校當局과 教授의 方針 및 態度에 있으며 더 나아가 그 과정의 실시를 政策的으로 관장하고 있는 文敎行政當局의 시책에 있다고 생각된다. *